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1. 19.(화) 배포</p>		 <p>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</p>	
보도일	<b>2021. 1. 19.(화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1. 19.(화) 14:00 이후 보도 가능</b>				
담 당	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	과장 강정자	서기관 최원석 (☎ 044-203-7275)	사무관 윤여진 (☎ 044-203-7256)	사무관 제유진 (☎ 044-203-7272)
			주무관 이은주 (☎ 044-203-7263)		
	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	부단장 마소정	사무관 김근영 (☎ 044-203-7278)		
	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	과장 박은정	사무관 배태현 (☎ 044-202-3381)		

##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

- ◆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「2021년 사회정책 방향」 발표  
포용적인 일상 회복과 혁신적인 미래도약을 위해 부처공동 최초 수립
- ◆ 중앙·지자체, 행정부·사법부 공조를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 
및 '아동의 이익이 최우선' 되도록 입양체계의 국가책임 강화
- ◆ 초등돌봄 공백 보완을 위한 지자체-학교 협력 돌봄모델 신규 추진
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1월 19일(화)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.

### 「2021년 사회정책 방향」

- 2021년 사회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,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되었다.
  - 올해의 사회정책은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·돌봄·건강·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·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,
  -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.

- ①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한다.
  - 세대별 돌봄, 문화, 교육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사회기반시설(SOC)을 복합화하고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.
  - 생계급여와 기초연금, 고용보험 보장성과 장애인·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한다.
  - 중앙부처-대학-지역이 함께 마음 치유와 심리·정서 안정을 위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.
  
- ② 생태·재난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, 건강, 안전을 지킨다.
  - 탄소중립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을 조성하고,
  -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, 여성, 장애인, 고령층 등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.
  -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재난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그루밍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.
  
- ③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제도를 정비한다.
  - 인공지능과 3대 신성장 핵심산업인 미래차,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,
  -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신뢰로운 데이터 사회를 구축한다.
  - 문화적 영향력(소프트파워)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,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.

- ④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.
- 지자체·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, 데이터·신기술·증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.
  - 건전한 상식에 맞는 **정당한 법 집행**이 이루어지도록 **양형기준 개선**을 추진하고,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**공정한 사회**를 구축한다.
- 올해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사회과제가 **유의미한 성과**로 이어지도록 **핵심과제를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(워크숍)**를 통해 논의·공유한다.
- 또한 사회부처가 협력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, **지자체·현장**과 교류하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는 한편,
  - 부처별 **주요과제와 신속한 집행**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포용국가 누리집(www.inclusivekorea.go.kr) 안전 참고

### 「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」

- 정부는 그간의 아동학대 방지 및 대응 방안을 통해 마련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, 이번 「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」을 마련하였다.
- 먼저, 초기 현장 대응에서 **정확한 판단과 조치**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·학대예방경찰관 등 **대응 인력의 전문성**을 강화하고, **조사의 이행력**을 확보한다.
- 경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**업무 여건 개선과 인력 보강, 수사체계 개편**도 추진한다.
- **즉각분리제도 도입** 후 예상되는 피해아동 **일시보호수요** 증가에 대비하여, **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**과 **위기 아동 가정보호 사업** 신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.

- 입양체계 전반에서 **국가책임**을 강화하고, 예비 양부모 교육 확대와 **입양 초기 집중 지원**을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※ 보건복지부,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예정(1월 19일 15시 30분)

### 「지자체 - 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(안)」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교육부는 **초등학생 돌봄 공백**을 해소하고 **아동 중심의 돌봄**을 제공하기 위해 **‘학교돌봄터 사업’**을 추진한다.
- 동 사업은 「온종일 돌봄체계 구축·운영 실행계획」(2018년 4월 발표)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,
  - 지자체가 **교육청·학교와 협력**하여 **3만 명 규모**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, **돌봄 운영시간 연장,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** 등을 통해 **질 높은 공적 돌봄**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학교돌봄터 사업은 **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(교실 등)**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**학교 공간을 활용**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,
-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**안전보장,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·관리에 대한 책임**을 지게 된다.
  - 보건복지부는 **2021~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**하여, 학교 돌봄터 1실당 **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**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.

- ①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 :  
**시설비(공간 리모델링비 등)와 운영비(인건비 등) 지원**
- ②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고, 같은 학교 내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: **신규 설치 → 시설비·운영비 / 전환\* → 운영비 지원**  
 \* 사업 시행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같은 학교 내 지자체 돌봄교실 포함
- ③ **사업 시행 전부터** 지자체에서 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돌봄을 제공 중인 경우 :  
**운영비 지원**

※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더라도 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 
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

○ 2021년 사업 예산은 시설비 총 225억, 운영비 총 158억으로서,  
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·교육청·  
지자체가 1:1:2 비율로 분담한다.

□ 지자체\*가 교육청·학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,  
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 
설치·운영하게 된다.

\*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(제주시, 서귀포시 포함)

○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 
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(13시~17시)을 기본으로 하되,  
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\*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\*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(7시~9시), 또는 방과후 저녁돌봄(17시~19시)

○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, 운영을 위탁하는  
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·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\*을 중심으로  
위탁을 추진하여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.

\* 질 높은 사회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  
법인으로 2020년 총 11개 운영 중(2021년 3개, 2022년 3개 신규 설립 목표)

□ 한편, 학부모들이 「정부24」 원스톱서비스\*에서 학교돌봄터를  
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이다.

○ 이를 통해 마을돌봄(다함께돌봄센터 등) 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기능  
구축과 맞물려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 
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\* 마을돌봄(2020년 6월), 초등돌봄교실(2021년 1월), 학교돌봄터(2021년 하반기 예정)

